

국민의당 “강경화 반대”...靑 비상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김상조 조건부 찬성·김이수 혼선

임명강행 땀 협치 제동...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간의 허니문은 깨지는 것은 물론 협치에도 급제동이 걸리면서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찬성 입장을 나타내지 않아 인사청문 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예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지 않

아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직 임명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의통위는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의 채택 거부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치 체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 여권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이날까지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서 평가할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찬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낙마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운명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김 후보자는 총리와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 채택 뒤 본회의에서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된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에 후보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찬성 의견이 개진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부

인의 계약직 영어강사 임용 등과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해당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찬성으로 기운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비토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기 내각의 검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개혁입법 드라이브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들은 강 후보자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부적격’ 낙인을 내린 상태에서 인사청문 정국에 이어 6월 임시국회는 협치 실종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온 추경 ‘가시밭길’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 불가”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야권의 반대가 강경,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간사 선임에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추경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 자칫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장·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11조 원대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 목적이 단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협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야에 퍼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이수 “5·18 사형판결 가슴에 짐”...버스기사에 직접 사죄

배웅주씨 청문회 출석 “세월 흘렀으니 화해 했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군 판사 시절 사형선고를 내렸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버스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배웅주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배 씨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배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군사법원의 판사가 다른 야인 김 후보자였다. 법원은 이후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1998년 재심사건에서 ‘현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된 다”며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37년 만에 다시 만난 배 씨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면서 당시 일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그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뜻밖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며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자유한국당 배승주 의원의 물음에 “아까도 (김 후보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말했다. 배 씨는 또 “(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 심정적으로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회유나 협박성 전화를 받았느냐’라는 물음엔 “가족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며 “협박, 회유가 아니라 ‘나가서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소리도 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맘이 괴롭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도소에 있어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내가 걱정될까 봐 감추고 있다가 출소한 뒤에 담당 형사가 이야기했다”며 “집에 갔더니 사진 한 장만 덩렁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고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도청 앞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 고, 어떤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군중들이 차를 밀고 그런 상황이었어서 차를 놔두고 현장을 피했더니 다음 날 경찰이 연행해갔다는 것이다.

배 씨는 “사고를 느끼지도 못했느냐”는 질문에 “운전사라는 게 뭐 한 마리라도 피해 간다”며 “일반버스 운전할 때 8만~9만원을 받다가 27만원을 받았다. 회사 상무하고 높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간 게 그런 일이 됐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죄송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 배웅주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12일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다. 또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실무협의 를 진행한 결과,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편성을 두고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지난 1일 “인사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라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오늘 광주서 현장 최고위

전국순회 100만 당원운동...시청·한전서 현안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9일 광주에서 민생 경청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19대 대선 이후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19대 대선 공로자 220명에 대한 포상을 한 뒤 나주 혁신도시 한 국전력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전

남 에너지 산업 메카 육성’에 대한 논의 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100만 당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과 광주에 이어 대구(14일), 제주(16일), 충남(21일), 강원(23일), 대전(28일) 등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100만 당원운동’은 추미애 대표가 깃발을 들어 올린 당 조직 다지기의 일환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당세를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1인 2,000만원 이상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